

## 도시계획

문 1. 도시설계의 역할이나 목표와 관련이 적은 것은?

- ① 광역차원의 거시적 접근을 통한 도시계획의 제도적 실현
- ② 다양한 도시공간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중재
- ③ 대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축행위에 대한 관계 유도
- ④ 공공성 있는 외부 공간의 확보

문 2. 방재업무에 예방 - 대비 - 대응 - 복구의 4단계 진행 과정 개념과 관계 있는 사람은?

- ① 윌리엄 페탁(William Petak)
- ② 조르주 외젠 오스만(G. E. Haussmann)
- ③ 울리히 벡(Ulrich Beck)
- ④ 다니엘 번햄(D. Burnham)

문 3.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과 관련이 적은 것은?

- ① 유클리드 지역제(Euclidean zoning)
- ② 콤팩트 도시(Compact city)
- ③ 생태도시(Eco-city)
- ④ 스마트 성장(Smart Growth)

문 4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닌 것은?

- ① 6홀 골프장
- ② 일반음식점
- ③ 실내사격장
- ④ 무도장

문 5. 「도로법」상 도로 부속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로이용 지원시설 -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등
- ② 도로안전시설 - 시선유도표지, 중앙분리대, 과속방지시설 등
- ③ 도로부대시설 - 통행료 징수시설, 도로관제시설, 도로관리 사업소 등
- ④ 교통관리시설 -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

문 6. 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상 도시·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토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며, 특히 인구증가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·군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고,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.
- ③ 도시·군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,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·군(광역시 안에 있는 군 제외)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 명 이하인 모든 시·군도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문 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㉠ ~ ㉣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개발행위의 규모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·상업지역·자연 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은 ( ㉠ )제곱미터 미만, 공업지역은 ( ㉡ )제곱미터 미만, 보전녹지지역은 ( ㉢ )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개발행위가 「농어촌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|      | ㉠  | ㉡  | ㉢ |
|------|----|----|---|
| ① 5천 | 2만 | 1만 |   |
| ② 5천 | 3만 | 1만 |   |
| ③ 1만 | 3만 | 1만 |   |
| ④ 1만 | 3만 | 5천 |   |

문 8. 토지이용 구분에 따른 유출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심 상업지역 > 단독주택 밀집 단지
- ② 논 > 밭
- ③ 잔디나 수목이 있는 공원 > 산지
- ④ 포장된 도로 > 미개발지

문 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도로율과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 기준은? (단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상 증감은 고려하지 않음)

- |                 | 도로율           | 간선도로 도로율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① 7% 이상 15% 미만  | 3% 이상 5% 미만   |          |
| ② 10% 이상 20% 미만 | 5% 이상 10% 미만  |          |
| ③ 15% 이상 30% 미만 | 8% 이상 15% 미만  |          |
| ④ 25% 이상 35% 미만 | 10% 이상 15% 미만 |          |

문 1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·도지사가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- ① 현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
- ② 산사태가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- ③ 해일이 최근 10년 이내 2회 발생하여 방파제가 유실된 바닷가
- ④ 수해가 최근 10년 이내 1회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지역

문 11. 지리정보시스템(GIS)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분석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?

- ① 군집분석(cluster analysis)
- ② 버퍼분석(buffering analysis)
- ③ 근린분석(neighborhood analysis)
- ④ 중첩분석(overlay analysis)

문 12.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주택용지면적의 수요추정에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적은 것은?

- ①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법
- ② 주택호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
- ③ 공공시설 면적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
- ④ 주택유형에 따른 규모별 주택호수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방법

문 13.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?

- 영국 찰스 황태자의 영국건축비평서에서 출발하였다.
- 사업추진을 위해 10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토지이용과 오픈 커뮤니티(open community) 조성을 지향하였다.
- 교외지역의 녹지개발보다는 기성시가지 및 기개발지역의 압축개발과 재생에 주안점을 두었다.

- ① 전원도시운동(Garden City Movement)
- ② 도시미화운동(City Beautiful Movement)
- ③ 어반빌리지운동(Urban Village Movement)
- ④ 전통적 근린지역(Traditional Neighborhood District)

문 1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함)

- ㄱ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
- ㄴ.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
- ㄷ.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,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
- ㄹ. 교통처리계획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1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유통·공급시설에 해당한다.
- ②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.
- ③ 하천은 교통시설에 해당한다.
- ④ 시장은 공공·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.

문 16.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구변화는 출생,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.
- ② 선형모형은 과거 인구가 거의 동일하게 증감되었고, 미래에도 같은 추세가 예상되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지수성장모형은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인구예측에 원용한 것이다.
- ④ 수정된 지수성장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선을 설정한 모형으로 S자형의 모양을 지닌다.

문 17.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수립하는 긴급지원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재해 수습 홍보
- ②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
- ③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
- ④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

문 18.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해지도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된다.
- ② 해안침수예상도란 태풍, 호우,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.
- ③ 재해정보지도란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,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9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근린공원의 구분에 따른 유치거리 및 규모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공원구분	유치거리	규모
① 근린생활권 근린공원	500미터 이하	1만제곱미터 이상
② 도보권 근린공원	1천미터 이하	5만제곱미터 이상
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	제한 없음	10만제곱미터 이상
④ 광역권 근린공원	제한 없음	100만제곱미터 이상

문 20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,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·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,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